

[발표 3]

프랑스의 친출산 정책에 대한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비판 적 고찰 - 제3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유은주(한림대 박사과정)

이관호(한림대 석사과정)

1. 서론

2006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는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출산을 하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risk)으로 간주되면서 국가, 전문가 집단, 관련 이익단체들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산이란 복합적인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과 개인의 생존전략이 맞물린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현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사영역의 젠더관계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면한 초유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서구 선진국들이 한 세기 전에 겪었던 문제이다. 당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방식은 매우 달랐다. 프랑스처럼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족정책의 기초를 마련한 나라도 있고, 스웨덴처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족정책을 채택한 나라도 있다. 개별 국가의 가족 관련 정책은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했던 학자(Esping-Andersen 2002; Gautier 1996; Sainsbury 1996)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모든 제도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프랑스의 친출산주의적 가족정책 역시 정책 형성기였던 제3공화국이라는 특정 시대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은 공화국의 이상 속에서 활발하게 민주정치를 실험했던 시기였다(홍태영, 2003). 당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도 공론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집단적인 태도는 전복적인 운동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Christine Bard, 1997).

그렇다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위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는 현 단계에서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관점과 개입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취했던 개입과 저항의 한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프랑스의 친출산주의적 가족정책의 역사적 배경

출산율 하락은 제3공화국에서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었다. 1870년 프러시아 전쟁에서의 패배와 영국, 독일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형성된 강박관념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130만 명이상의 생산연령 인구를 상실하게 되면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당시 프랑스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

<표 1. 1870년-1945년 여성의 평균 자녀수>

	1870	1885	1900	1915	1930	1945
영국&웨일즈	4.94	4.16	3.40	2.59	1.95	2.04
프랑스	3.42	2.90	2.89	1.50	2.27	2.28
독일	-	-	4.77	2.89	1.88	1.53
일본	-	-	-	-	4.73	4.63
스웨덴	4.11	4.34	4.06	3.06	1.96	2.59
미국	-	-	-	-	2.56	2.48

자료: Gauthier(1996), p14, 재인용.

그러나 당시 프랑스 사회에 팽배했던 ‘프랑스 인종의 생존, 민족의 자살’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가진 압력단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의 집단적인 움직임 속에서 여성들은 출산율 하락에 대한 논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친출산주의자들은 “공부와 일, 여가에 자신을 바치는 ‘신여성’의 이기주의”를 비난하였으며, 페미니스트들은 공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소위 ‘해방된 여성’은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구학적 위기의 너무나 작은 일부였으며(Christine Bard, 1997), 스펙트럼도 다채로웠다. 페미니즘의 기치 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친출산주의자와의 연대를 통해 친출산이론을 고안한 절충주의자부터, 자유로운 모권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에 이르기까지 그 입장은 너무나 다양하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의 다양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전략이 깔려있어 이들의 절충과 타협, 저항의 지점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친출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반>

주체	Arsene Dumont	Adolph Landry	Ferenand Bovert	페미니스트 집단
특징	출산율 저하 원인은 민주주의 진보에 따른 젊은 부부들의 과도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비난	출산율 저하는 프랑스 혁명 이후 시작된 정신구조의 근본적 변화때문이라고 비난	‘부권의 의무’와 군복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1차대전 후의 강한 애국주의의 경험으로 친출산주의 신념 공유
	신여성(공부와 일, 여가에 자신을 바치는)의 야망과 이기주의의 비난	자녀 양육의 ‘이타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의 구별 필요성 주장	외적의 침략과 이민의 일상적 흐름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다산의 미덕 강조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권 요구
	- 전통적 가족가치 - 모성 찬미 -친출산주의	- 민족주의 - 친출산주의	- 부국강병 - 민족주의 - 친출산주의	모권의 보호 자율적 모성 출산주의

자료: Maire Cross, Sheila Perry(1997), 전광희(2005)에서 재구성

3. 친출산주의의 제도화와 페미니스트 집단의 개입 및 저항

친출산주의의 압력의 성과는 제1차 세계대전 말에 나타났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친출산주의의 성 불평등성, 반여성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 평등한 관점에서 독자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절충주의자와 개혁적인 페미니스트 집단의 연대였던 프랑스 여성연합(The National Council of French Women)이 친출산주의자들과 문화적, 도덕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항의 강도와 수단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전망이 여성의 평등권 확보, 노동권 확보에 이르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만 초점을 두었던 관련 정책 안에 모권 보호와 여성의 선택권이 담겨지도록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이들의 기여이다. 즉, 모권의 제도화, 모권의 정치학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친출산주의와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낙태금지법과 가족수당 및 가족법전의 제도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이 취했던 친출산주의와 구별되는 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낙태 금지법 : 자율적 모권 및 모권 보호

1920년 7월 낙태에 대해 가혹한 벌금을 내리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성병 예방 외의 모든 피임수단의 판매 등 신-멜서스적인 운동이 금지되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성적 자유'와 낙태권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났으며, 특히 급진적 페미니스트 집단은 자유롭게 선택된 모성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법안에 반대하였다.

신-멜서스 단체의 일원이었던 급진적 페미니스트 펠티에(Madeleine Pelletier)와 라이(Arria Ly)는 임신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안하는 한편, 불법적인 낙태와 반복적인 임신에 따른 여성 사망률 증가, 일할 권리에 대한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였다(Joan W. Sctott, 2006). 이들은 또한 미혼모가 도덕적 격분의 대상이 아닌 빈곤의 희생자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한 수용시설 건립을 건의하였다. 법의 형평성을 들어 낙태 여성과 똑같이 남성 배우자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1920년대에 여성가장의 수는 전전(戰前)의 2배가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거부되었다. 하지만, 1928년 모성수당은 법제화되었다. 이는 노동권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에 대한 대처 법안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 한부모 여성 가구주를 위한 피난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해 헌신하는 등, 체계적인 모권의 지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친출산주의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여성을 시민 개인이 아닌 어머니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젠더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친출산주의의 제도화 과정>

연도	법/제도	비고
1854	아르멜 ¹⁾ 의 공장에서 가족수당 지급	-
1863	해군성 가족수당 지급	10세 이하 자녀 대상
1892	여성노동보호법	-
1913	출산휴가	비취업/비결혼 여성에게 불리
1920	피임과 낙태금지법	-
1928	모성수당	-
1932	가족보상금고가입의무화	가족수당 본격화
1939	가족법전	가족수당 강화
1941	단일임금수당	비시정권의 출산장려정책

자료: Gauthier(1996), 전광희(2005)에서 재구성

2) 가족수당 · 가족법전

가족수당은 출산을 회복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었다고 평가되며, 동시에 가족법전(Family Code)은 프랑스 가족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된다.(Christine Bard, 1997). 19세기 중반부터 존재했던 가족수당은 1932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에 의해 강제되었다.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가족수당이 중요한 것은 바로 출생순위에 따른 수당의 차별적 책정에 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5세까지 기준임금의 5%, 둘째 자녀 10%, 셋째 자녀 15%로 책정되어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의 일환이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력 증진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역할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수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여성 개인의 삶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열망 속에서 당시 페미니스트집단은 모성과 가족가치를 강조하는 친출산주의적 가족정책의 반페미니스트적인 이데올로기, 전통적인 젠더관계와 가족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담론을 개발하거나, 도전하지는 못하였다.

4. 결론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당시에 팽배했던 ‘민족자살(suicide national)’의 공포를 수용하면서 친출산주의 경향에 동조하고 절충한 측면이 컸다. 이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의 태생적 한계임과 동시에, 친출산주의자들과의 공조를 통해 여성 참정권²⁾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위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절충과 타협은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여성해방의 진로는 방해받았으며, 프랑스 여성의 동등권 쟁취는 지체되었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성평등이 우선적인 사회 목표가 되어야 한다.

- 1) 1854년 아르멜(Leon Harmel)이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보조의 일환으로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이후 프랑스 가족수당으로 발전하였다.
- 2) 뉴질랜드(1893년), 오스트레일리아(1902년), 독일(1918년), 스웨덴(1921년), 미국(1920년), 영국(1928년) 여성들에 비해 프랑스(1946년) 여성들의 참정권 확보는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

둘째,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남성중심의 노동규칙이 변화되어야 하며, 가부장적인 가족규범을 해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Joan W. Scott/공임순 외 역(2006),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앨피.
- 민유기(2006),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1874-1914)", 서양사론 89호, 한국서양사학회.
- 전광희(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경애(2000), "프랑스사회에서의 페미니즘과 여성", 성평등연구,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 홍태영(2005),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 Esping-Andersen, G. et al.(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 Maire Cross, Sheila Perry(1997),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in France, London and Washington.
- Sainsbury, D.(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 press.
-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 Christine Bard(1997), "Marianne and the mother rabbits: feminism and natality under the Third Republic", London and Washington.